

우리의 대학을 위하여

성기수(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위원)

1992.1.

우리의 대학은 그 대부분이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교육환경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양성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인력의 수준은 후진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환경과 인력양성체제를 여하히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느냐가 우리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그동안 대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아니했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론할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관료적이고 통제 일변도의 대학운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입시제도, 정원, 등록금 등 대학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 대학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식물인간과 같은 식물대학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대학재정의 빈곤과 교수 및 연구시설의 절대부족이라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연구는 물론 교육마저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1인당 연간 교육투자비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 비하여 1/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3개 대학은 4대의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10배의 인구를 갖는 한국의 100개 대학은 1대의 슈퍼컴을 나누어 쓰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빈약한 대학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학교수의 문제나 연구시설 확보 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대학의 기부금 입학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국민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

는데 정부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대안 없이 재원확보의 방편의 하나를 봉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하나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요즈음 아파트나 호텔 건축에 몰리는 돈을 대학에 유인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 제일의 시설, 기숙사, 식당 등을 갖추고 경쟁적으로 우수한 교수를 모시도록 하려면 기업가나 개인이 경쟁적으로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고액 가정교사, 학원 등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흘러 가고 있는데 그 돈이 대학으로 흐를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50, 60년대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탓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 그때 팽창한 대학들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엄청나게 컸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재정문제와 함께 또하나 심각한 문제는 대학입시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대학 입시제도의 병폐는 그것이 대학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는 물론, 진학일변도의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 청소년 범죄 등 사회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허다한 병폐를 안고 있는 대학입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정부가 대학입시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입시부정이 생기고 더 나빠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는 몇몇 대학에서 일어난 대학 입시 부정사건과 관련하여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식의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발상은 옳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입시부정 사건은 법을 어긴 것이므로 법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인력수급계획을 바꿀 일은 아닌 것이다. 입시부정과 대학의 정원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대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학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문제마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미시적인 통제를 청산해야 한다. 과격한 대학생들의 폭력사태는 지금보다 더 엄한 법으로 다스리되 대학이 기부금을 받든, 무시협 입학제도를 도입하든, 아이큐 테스트를 하든, 학력고사를 치르든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대학은 더 나빠져서 도태되고, 잘한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스스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대학운영의 선진화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의 선진화와 함께 해외 선진국의 대학을 통한 첨단기술인력의 양성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극심한 기술보호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고가의 기술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첨단기술의 직접적인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선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선진국에 있는 대학을 이용하여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이 높은 기술보호 장벽을 우회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학문의 세계에는 국경의 장벽이 없고 많은 경우 기술의 씨앗이 대학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발전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는 추세에 있고 학술이론으로부터 상품기술로 연결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외 선진국에서의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해소케 하여 기술과 마케팅의 침범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진국의 대학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나라의 89년 현재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를 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 이하의 수치이고 전체 연구원 수에 있어서도 미국의 1/20, 일본의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얼마전 미국 국제교육원의 자료에 나타난 국가별 미국 유학생 수를 보면, 중국이 4만명으로 1위이고, 2위는 일본으로 3만7천명, 3위는 대만으로 3만4천명, 4위는 인도로서 2만9천명인데 비하여 한국은 2만3천명으로 5위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한 연구원 수준과 해외인력 양성노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와 비슷한 기술수준에 있으며 경쟁 대상국인 대만의 인구가 우리의 절반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 유학생 수를 대만의 두배인 68,000명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 EC가 세계 기술과 경제의 세 중심지라고 본다면 일본, EC에도 각각 68,000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적으로 20만명 수준을 첨단기술 상비군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 문부성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 가 있는 유학생 수는 중국 18,000명, 한국 8,000명, 대만 6,500명, 인도 125명으로, 인구에 비해 한국은 역시 대만에 뒤지고 있다. 한국의 EC유학생은 현재 11,600명으로 여기서 제시한 목표치의 6분의 1이다.

이들 첨단기술 상비군에 대해서는 또한 병역을 면제함으로써 첨단기술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연구 및 생산현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전쟁중에도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병역을 면제해줌으로써 이들이 전후 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기술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선진화와 함께 20만명의 첨단기술 상비군의 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지난날 우리는 가격경쟁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첨단 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지 아니하고서는 국제시장에서 발을 부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첨단기술의 확보는 이제 발등의 불만큼이나 화급을 요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급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오직 대학의 선진화와 함께 20만명의 첨단기술 상비군을 양성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